탈당 경력서 일자리 대책까지…송곳 질문에 예비후보들 진땀

민주당 광주·전남 공천 경선 후보 면접심사 이모저모

전남 11개조, 광주 6개조 진행

자기소개 뒤 4~6분 질의응답

단체장 재선 실패 이유 묻기도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0일 4·15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광주·전남지역 50명의 지역구 공천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면접을 시작했다. 면접 장소인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주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날 광주 14명, 전남 36명의 예비후보들은 오전 일찍 KTX 등을 이용해 지역구를 출발, 여의도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대부분 전날 늦은 밤까지 공천 면접에 대비한 듯 피로가 가시지 않은 얼굴이었다. 면접이 시작되기 전 여의도에 도착한 예비후보들은 찻집과 주변 지인의 사무실 등을 찾아 최종 면접 점검을 하는 등 막판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 않았다.

특히 전날 경기지역 후보 79명을 면접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 진행된 경기(22명), 전북(18명) 지역 예비후보들에게 '송곳 질문'이 쏟아졌다는 소문이 돌면서 광주·전남지역 예비후보들도 '예상 질문'을 정리하는 데 분주했다.

오전에 면접을 마친 다른 지역 후보자들에게 휴대전화 등을 통해 질문의 강도를 묻는 예비후보들도 상당수였다.

이날 면접은 전남지역구 11개조, 광주지역구 6개 조로 나눠 진행됐고 권리당원명부 과다 확인 의혹이 제기된 광주 광산을의 면접은 13일로 연기됐다.

면접은 지역구별로 한 조로 묶어 진행됐고, 예비후보가 5명인 여수갑과 나주·화순 지역구는 2개 조로 나눠 면접이 이뤄졌다.

1분가량의 자기소개 뒤 후보별 4~6분가량 질의응답이 진행됐고, 지역구에 따라 현안사업 등에 대한 공통질문도 이어졌다.

무엇보다도 면접 도중 후보자별로 ▲탈당 경력 ▲탈당 후 무소속 등 다른 정당 후보로 출마 ▲음주운전 등 범죄 사실에 대한 질문도 쏟아져 일부 예비후보들이 진땀을 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자치단체장을 역임한 예비후보들의 경우, 문제가 되고 있는 재직시절 현안사업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도 많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재선에 실패 한 총선 예비후보에게는 '재선 실패의 이유'를 묻는 등 후보별 맞춤식 질문도 눈에 띄었다.

일부 공천관리위원들은 지역공약 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을 집중 질의했고, 전남지역의 열악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묻는 공천관리위원들의 질문도 있었다.

이 밖에도 과거 공기업과 공공기관 수장을 지낸 일부 예비후보에게는 해당 기관의 공정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 등을 묻는 등 예비후보의 특성과 경력을 확인하고 전문성을 따지는 질문도 상당수 있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9일부터 시작해 오는 13일 까지 닷새 동안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예비 후보 473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다. 이번 면접이 마무리되면 경선 지역 및 단수 공천 지역, 전략공천 지역 등이 가닥 잡힐 예정이어서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공천심사는 정량평가인 적합도 조사 40%와 정성평가 60%로 구성되는데 하위 20%에 대해서는 정성평가를 통한 정무적 판단도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성평가는 정체성(15%), 기여도(10%), 의정활동 능력(10%), 도덕성(15%), 면접(10%)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4명…민주당, 권리당원 과다 조회 후폭풍

최고위, 경선 불이익 논의

일부후보 "적법 절차" 반발

더불어민주당 일부 예비후보들이 4·15 총선 후보자 공천 신청 과정에서 규정을 넘어 당 홈페이지에 등록된 권리당원 명부를 과다하게 조회한 내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당은 최고위원회에서 과다 조회 신청자들의 '반칙'에 대해 징계 방침을 세우고 있는 반면 해당된 일부 후보들은 중앙당의 후보자 추천 신청과정에 규정 또는 제한이 없었고, 권리당원을 확인하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 권리당원 명부 조회 기준을 넘긴 예비 후보는 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권리당원 과다 조회 신청자에 대해 공천 심사 및 경선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의 징계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12일 최고위를 다시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는 후보자 공천 접수 과정에서부터 당이 제시한 규칙을 어긴 '반칙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방법 등의 논의가 있었다.

공천관리위원회 면접 과정에서 감점을 주는 방안과 경선시 감산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과다 조회자에 대한 징계방침에 대해 이해찬 대표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권리당원 조회 시스템 문제 등 일부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추가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12일 최고위에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반면, 중앙당의 권리당원 명부 다수 조회자로 분류된 일부 예비후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A예비후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달 20일 후보등록에 따른 권리당원 추천서를 받기위해 적법한 열람 절차를 거친 것이다"면서 "중앙당의 후보자 등록시스템 가이드북 및 안내사항에는 추천인 조회와 관련한 아무런 규정, 지침, 제한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당의 가이드라인이 공지된 21일 이후에는 어떠한 규정 위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B예비후보는 "권리당원 2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하는데, 계속적으로 권리당원 확인이 되지 않으면서 조회 수가 많아질 수 밖에 없었다"면서 "특히 중복 추천을 피하기 위해 권리당원 숫자를 늘리다보니 조회수가 늘어난 것이다"고 해명했다.

공천접수를 위해 필요한 권리당원 25명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회 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후보등록을 위해 당 홈페이지에 등록된 권리당원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문 대통령 "신종 코로나 극복 가능…경제 어려움 이겨낼 것"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사태와 관련 "정부는 국가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하고 있고 국민은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하고 있다"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다. 전문 의료진이 공개적으로 밝혔듯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신종코로나는 중증 질환이 아니며 치사율도 높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안심해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적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고, 의료진의 역량도 뛰어나 신종코로나가 적절히 관리되고 치료되고 있다"며 "3명의 확진환자가 완치돼 퇴원했고, 다른 환자들도 안정적이어서 퇴원환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신종코로나는 살아나던 경제에 예기치 않은 타격을 주며 수출과 관광, 생산과 소비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며 "우리는 경제에 미치는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며 "정부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1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남아있는 교민과 중국인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 '3차 전세기'를 투입한다. 3차 귀국자 규모는 150여명이며, 14일간 임시로 지내게 될 생활시설은 경기도 이천 합동군사대학교 부속기관인 국방어학원으로 결정됐다.

현재 우한에는 교민 230여명이 머무르고 있으며 탑승 가능자는 한국인 국적자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바른미래·대안신당·평화당 호남권 3당 통합추진기구 출범

이르면 이번주 통합 선언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3개 야당은 10일 통합추진기구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통합 논의에 나섰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통합개혁위원장, 대안신당 유성엽 통합추진위원장. 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이날 오후 상견례를 겸한 회동을 갖고 통합추진기구 출범을 공식화했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평화당 측에서 당의 입장이 아직 최종 정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11일 오전 귀빈식당에서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리로 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대통합개혁위원장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등 다른 정당들은 후보자 공천에 나서고 있는데 우린 통합 논의를 하면서 후보 공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모두가 한 발짝씩 물러나 통합의 대의에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혔다.

3개 정당이 모두 '선명한 개혁성'을 갖춘 통합신당 창당에 뜻을 함께하고 있어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경우 이르면 이번주 내에 통합 공식 선언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신당 지도부 구성 및 총선 공천 등을 둘러싸고 의견차를 조율하는 게 숙제로 꼽히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은) 지역주의를 넘어 미래세대와의 통합을 위해 한국 정치를 새롭게 하고 새 미래를 열어가는 중도개혁 실용정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안신당 최경환 대표도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통합의 원칙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개혁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최고위에서 "명분과 가치가 있는 통합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